지식경제부	보도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2012년 3월 2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박종원 행정관리담당관(02-2110-5241), 박희범 사무관(5244) 최우혁 동반성장팀장(02-2110-3994), 박일철 사무관(3995)		

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샵 개최

- 공공기관들에게 근무기강 ·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 -
-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을 최초로 발표하고 5대 핵심과제 제시 -

□ 지식경제부는 3.21(수) 15:00 한전 아트센터에서 홍석우 장관과 한전 등 55개 공공기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샵」을 개최함

○ 홍 장관은,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에너지·산업·무역·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,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하고,

- **공공기관의 기강 해이 및 업무태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부터 솔선수범**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

○ 특히, 홍 장관은 **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**임을 밝히면서,

- 최근 고리 원자력발전소 정비중 전력공급 중단, 보령 화력발전소 화재 등과 같이 **국민들에게 우려를 줄 수 있는 사건,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이 사전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행**해야 할 뿐만 아니라,

- 사고 발생시라도 **체계적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가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**을 기해 줄 것을 요구

□ 이번 워크샵은 홍 장관 취임후 최초의 공공기관장 대상 워크샵으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전략, 지경부·공공기관간 파트너쉽 정립, 기관장 리더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됨

< 따뜻한 기관장 >

□ **공공기관과 중소 협력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으로 5대 핵심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논의됨**

① 성과공유제의 확산 : 공기업 10개사 내외를 성과공유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추진 (상반기중)

② 2·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노력 확산 : 공공기관-1차 협력사에 비해 1차-2·3차 협력사간은 불공정 거래가 심화됨을 감안, 대금지급·결제조건 등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 (2·3차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, 2·3차 기업에 대한 결제불량 협력사에 불이익 부여 등)

③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: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를 개선하여 소액물품은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의무화하고(하반기) 중소기업 직접 구매 위반 자동적발 시스템 구축 등(중기청)

④ 국내외 판로 개척지원 : 공공기관 차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알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정부-공공기관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 협력업체 해외동반 진출 지원 등

⑤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: 동장성장 투자재원 협약, 생산성혁신파트너십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를 확산하여 협력사의 기술·생산성 향상 등 직접지원을 강화함으로서 플랜트 등 인프라 국산화율 제고

※ 5대 핵심 실천과제 세부 내용은 붙임 3 참고

□ **지경부는 공공기관의 '11년도 동반성장 실적 평가결과를 최초로 발표**하였으며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

○ 동서발전 등 16개 기관을 '동반성장 우수기관'으로 선정하였으며, 특히 동서발전은 CEO의 리더십 하에 전사적으로 동반성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

* 우수기관(16개) : 한국동서발전㈜, 한국남부발전㈜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서부발전㈜, 한국중부발전㈜, 한국전력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수력원자력(주), 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산업단지공단, 농수산물유통공사, 국민연금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국민체육진흥공단, 한국마사회

○ 참석 공공기관들 중 대표적인 동반성장 실천사례를 발표함으로서 우수 사례를 공유

<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천사례 주요내용 >

기 관	주 요 내 용
동서발전	동반성장 전담조직 위상 강화,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가동
한수원	동반성장 프로그램의 대상을 2·3차로 확산하기 위해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 노력 경주
지역난방공사	중소기업 지원범위에 대한 내부규정을 기존 법령상 범위 이상으로 강화

○ 또한, 「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평가제도」 개편*, 「공공기관 동반성장 애로해소 센터」 설치 등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

* (기존) 평가를 공공기관 제출 실적에 의존 → (개선) 협력업체의 체감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

□ 한편, 이번 워크샵에서는 행사비 절감, 자율기부 등을 통해 지경부 및 공공기관에서 약 1,6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

○ 모금 성금은 주5일제 수업시행에 따라 주말 여가시간 활용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습비 지원, 새터민 학생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임

< 일하는 기관장 >

□ 지경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정책형성과 집행의 공동체로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'산하'기관이 아닌 '협력'

기관으로서 **지경부와 상호존중의 동등한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**

○ 양 기관간 파트너쉽 강화방안으로 지경부는 중앙 행정기관 최초로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시 **지경부 직원이 지켜야할 행동지침인 「對공공기관 업무협조 가이드라인*」을 마련, 이행**키로 함

* 공공기관에 대한 친절한 대응자세 견지 및 업무협조 충실, 업무공유 및 소통·공조 강화, 무리한 업무지시 자제 등

○ 공공기관이 업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지경부 해당과에 대해 업무 친절도, 업무 협조정도 등을 평가하는 「고객만족도 조사」를 실시하기로 하고(상반기중), 평가 우수과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

○ 공공기관장들도 지경부-공공기관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공공기관-협력사와의 관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함

□ 근무기강 확립과 역량평가 강화를 통한 조직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

○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정치 중립성 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강해이,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근무기강 확립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

○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역량평가 대상을 기존 15개 기관의 임원급에서 모든 공공기관 임원급으로 확대

< 역량평가 확대 방안 주요내용 >

·역량평가 대상 : (현재) 15개 기관 ⇨ (개선) 모든 공공기관 임원(기관장, 감사제외)
  * 단, 시행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, 직원 100명 미만 기관 제외

·상임이사 후보자가 아닌 경우도 미리 역량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

·역량교육 실시 : 기존에는 우수임원 "선발" 위주 ⇨ 역량있는 임원 "양성"으로 개선

○ 이외에도 체계적인 부채관리,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확대,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공공기관의 토요프로그램 협조 등 지경부-공공기관간 협조사항에 대해 당부

□ 지난 4년간 지경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

○ 지경부와 공공기관은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, 무역 1조불 달성, IT 융합 기반 구축, 원전 수출,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등 많은 성과를 달성

○ 특히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사실상 지경부와 공공기관 정책고객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, 향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

< 리더십있는 기관장 >

□ 공공기관의 CEO로서 기관장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

○ 리더십 특강, 공공기관의 리더십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며 소통을 중시하는 창의적 리더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

○ 리더십 강화 방안에 대해 그룹별로 자유 토론 후 기관장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세, 조직혁신을 위해 리더로서 가져야할 역량과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음

□ 지경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 강화 및 현안 이슈 공유를 위해 공공기관장 워크샵 및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개최할 예정

붙임1 공공기관장 워크샵 개요

□ **일시 및 장소 :** 3.21(수), 15:00~18:50 / 한전아트센터 양지홀(4층)

□ **참석자 :** 장관, 기조실장, 정책기획관, 산업경제정책관, 55개 공공기관장

□ **주요 내용**

○ **(일하는 기관장)** “지식경제가족 4년, 성과와 과제”, “지식경제가족의 역량강화 방안” 등 논의

○ **(따뜻한 기관장)** 공공기관-중소기업間 동반성장 방안 논의, 기부금 전달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

○ **(리더십 있는 기관장)** 리더십 특강, 공공기관장의 리더십을 통한 조직혁신 사례 공유 등을 통한 공공기관장 리더십 강화 유도

□ **세부 일정(안)**

구 분	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	15:00~15:05	·인사말씀	장관
일하는 기관장	15:05~15:25	·지식경제가족 4년, 성과와 과제	기획조정실장
	15:25~15:35	·지식경제가족의 역량강화 방안	정책기획관
따뜻한 기관장 ①	15:35~16:00	·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 -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전략(10′) - 기관별 우수사례(15′)	산업경제정책관 동서발전 등 3개
리더쉽 있는 기관장	16:00~16:50	·리더십 특강	
	16:50~17:00	·리더십 우수사례 발표	가스공사
	17:00~17:10	·휴식	
	17:10~18:20	·공공기관장 리더십 강화관련 논의 - 그룹별 자유토론(35') - 토론 내용 발표(35′)	그룹별 1명
	18:20~18:30	·마무리 말씀	장관
따뜻한 기관장 ②	18:30~18:40	·지경부 및 공공기관 성금 기부 - 기부금 전달식(7′) - 감사말씀(3′)	
	18:40~18:50	·사진 촬영	장관 및 공공기관장

붙임2 참석 공공기관장 명단

순번	기 관 명	성 명	직 위
1	한국전력공사	김 중 겸	사장
2	한국가스공사	주 강 수	사장
3	한국석유공사	강 영 원	사장
4	한국지역난방공사	정 승 일	사장
5	한국수력원자력	김 종 신	사장
6	한국남동발전	장 도 수	사장
7	한국남부발전	이 상 호	사장
8	한국동서발전	이 길 구	사장
9	한국서부발전	김 문 덕	사장
10	한국광물자원공사	김 신 종	사장
11	한국산업기술시험원	남 궁 민	원장
12	산업기술평가관리원	서 영 주	원장
13	한국산업단지공단	김 경 수	이사장
14	한국세라믹기술원	김 경 회	원장
15	정보통신산업진흥원	정 경 원	원장
16	한국무역보험공사	조 계 륭	사장
17	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	이 계 순	이사장
18	우체국물류지원단	천 창 필	이사장
19	한국우편사업진흥원	김 상 원	이사장
20	한국전기안전공사	박 철 곤	사장
21	한국가스안전공사	전 대 천	사장
22	에너지관리공단	허 증 수	이사장
23	한국광해관리공단	권 혁 인	이사장
24	한국전력거래소	남 호 기	이사장
25	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	이 준 현	원장
26	한국석유관리원	강 승 철	이사장
27	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	송 명 재	이사장

순번	기 관 명	성 명	직 위
28	한국전력기술	안 승 규	사장
29	한전KDN	김 병 일	사장
30	한전KPS	태 성 은	사장
31	한전원자력연료	김 기 학	사장
32	인천종합에너지	이 보 원	사장
33	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	이 성 범	이사장
34	우체국시설관리단	김 승 환	이사장
35	한국생산기술연구원	나 경 환	원장
36	한국전자통신연구원	김 흥 남	원장
37	한국기계연구원	최 태 인	원장
38	한국전기연구원	김 호 용	원장
39	한국화학연구원	김 재 현	원장
40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우 효 섭	원장
41	한국철도기술연구원	홍 순 만	원장
42	한국지질자원연구원	이 효 숙	원장
43	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	이 재 구	이사장
44	한국가스기술공사	강 기 창	사장
45	한국표준협회	김 창 룡	회장
46	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	황 주 호	원장
47	한국생산성본부	진 홍	회장
48	전략물자관리원	조 성 균	원장
49	한국원자력문화재단	천 병 태	이사장
50	한국중부발전	김 성 진	관리본부장
51	대한석탄공사	백 창 현	기획관리본부장
52	강원랜드	김 성 원	전무이사
53	한국산업기술진흥원	석 영 철	부원장
54	한국식품연구원	한 대 석	선임본부장
55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배 창 헌	정보조사본부장

붙임3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

I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필요성

□ 대형 구매자 ⇨ 동반성장의 파급효과가 지대

○ (구매규모) 공공부문 중소기업 제품 구매*는 중소기업 매출*의 10%, 이 중 공공기관*은 전체 공공구매의 48% 점유

* 공공부문 구매(중앙정부/지자체/공공기관의 물품·건설 구매, '09년) : 70조원
중소기업 매출(중소기업 제조·건설 부문, '09년) : 666조원

○ (협력대상) 다수의 협력업체와 거래*,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는 위치

* 지경부 소속 60개 공공기관은 연 1만개 이상의 기업과 거래
(1차 거래기업 4,800여개, 2차 거래기업 5,500여개)

□ 공익의 대변자 ⇨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 완수의무

○ 공공기관은 계약·중소기업 지원 등 관련 법령에 있어서 더 높은 기준의 준수의무가 요구

○ 민간부문에 대한 솔선수범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범적 수행 필요

□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제고 ⇨ 협력업체와의 상호 Win-Win 추구

○ 장기적으로 경영성과와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질 좋은 제품*이 바탕

* (동서발전 + 삼진금속 사례) 공동개발로 지멘스社에서 전량수입하던 가스터빈 부품국산화 → 211억원 원가절감, S社 매출5배↑(18억원→100억원)

⇨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,
민간부문에서의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앞당길 필요

Ⅱ 공공기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

□ (공정거래질서) 공정한 성과배분, 하도급 업체 보호 등을 위하여 공공계약·지급제도 등 개선

○ 선금 직접지불제 도입, 원청업체 선금수령시 하도급자에게 통보 의무화 ('11.5, 계약예규 개정)

○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확대 적용

*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확인제를 용역 및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확대 적용

□ (중소기업 참여기회) 중소업체에 대한 입찰 우대, 대기업 진출 자제 등 제도적 기반 강화

○ 공공기관은 소모성자재(MRO) 구입시 중소업체와 우선계약 의무 (판로지원법, '11.7)

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대상 기관 확대, 상시 점검체제 전환

* 기관: 210('09) → 499('12), 점검빈도: 연1회('10) → 매월('11)

○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 제한*

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시장참여 전면제한(SW산업진흥법 개정, '12년중)

□ (점검·추진체계) 공공기관의 노력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·확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

○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별 동반성장 실적 반영('12년~)

○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('11.2~)

* 15개 주요공기업으로 구성하여 동반위에 설치('11.2), 그간 2회 개최

Ⅲ 향후 추진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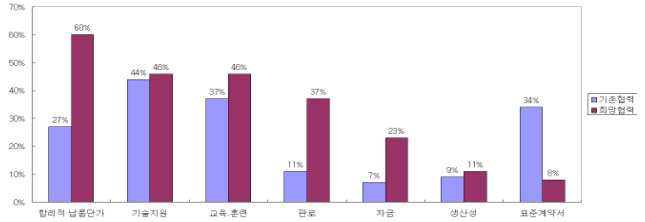
1. 보완 사항

□ 공정한 성과배분과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현장 요구

○ 협력업체는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경영자금·기술역량 애로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*

* 공공기관 협력업체 실태조사('12.1월) : 협력업체의 주요 협력희망 분야는 합리적 납품단가 반영(60%), 기술지원(46%), 교육(46%), 판로(37%), 자금(23%) 등 순

<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사 수요 : 체감 vs 희망 >



□ 거래단계 하부로의 확산노력 부족*

* 공공기관의 2·3차 수급자 동반성장 확산계획 '없다' 49% (실태조사, '11.1)

○ 공공기관과의 직접거래는 비교적 공정하나, 1차 - 2·3차 업체간 거래는 제도의 사각지대*, 하도급업체의 소통·민원창구도 부재

* (사례) 1차 SI대기업이 2차 SW하도급업체의 기성대금 요청을 무시하는 등 '길들이기' 만연에도 불구, 발주 공공기관은 사실을 모르거나 불간섭 경향

□ 공공기관 노력과 기업현장이 느끼는 체감도간 괴리

○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정책과 협력업체의 정책수혜 체감도는 큰 격차 → 구매실무자 업무부담 등으로 형식적 운영 지적

< 공공기관 시행제도 VS 협력업체 경험정도('12.1 실태조사) >

구분	공공기관(56개)	협력업체(90개)	격차
"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" 응답	56%	11%	45%p
"분리발주 시행" 응답	53%	14%	39%p
"하도급대금 지급확인" 응답	58%	26%	32%p

* (공공기관) "정책 시행중" 응답비율, (협력업체) "공공기관 시행혜택을 보았다"는 응답

2.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전략

◇ 공공기관을 “동반성장 문화확산의 전초기지化”

○ (추진방향) 공공기관을 정점으로, 민간으로의 문화확산 체계 마련

- 공정한 배분문화 확산, 하부 거래단계에 대한 배려, 중소기업 역량 강화, 현장의 동반성장 체감도 제고 등 문제점 해소 노력

○ (기대효과) 공공기관의 솔선수범, 계약운영(甲:공공 vs 乙:대기업)을 통해 기업현장의 거래관행 개선·문화정착

□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고, 지속가능한 추진·점검체계 구축

① 핵심 실천과제의 선정방향

○ 동반성장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일방적·시혜적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- 중소기업이 함께 Win-Win 가능한 과제 선정

- (경영효율성) 실행부담이 크지 않고 기관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
- (민간확산) 민간 대기업·하도급업체로 확산이 필요한 것
- (중기지원)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·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

< 5대 핵심 실천과제 >

① 성과공유제 확산 (공정한 배분→ 경영효율성+중기지원)
② 2-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(하부 거래단계 배려→ 민간확산)
③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충 (현장 체감도→ 중기지원)
④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(현장 체감도→ 중기지원)
⑤ 중소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(중기역량→ 중기지원)

② 추진·점검체계 구축

○ 현장 체감도 개선을 위하여 동반성장 실적평가 체계 개선, 애로해소 창구 마련, 공공·민간부문의 인센티브 확충 등

IV 핵심 실천과제(안)

과제 1 성과공유제의 확산

□ (배경) 성과공유제는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로서 ‘06년 법제화* 되었으나, 아직 대부분의 기업에서 활용은 제한적** 수준

* (상생법§8)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, 그 성과를 공유
**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설치한 확산본부에 수행과제를 등록하고 공식 추진중인 모기업수는 28개사로 집계

□ (내용) 공공기관은 성과공유제 중심으로 모델정립·실천집중*

* 성과공유제 확산방안(3.14): 성과공유 확인제, 조달·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

○ 공기업 10개사 내외를 성과공유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, 선도기관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추진

과제 2 2-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강화

□ (배경) 공공기관-1차 협력사간의 거래에 비하여 1차 협력사-2·3차 협력사간 거래 등 하부 거래단계로 갈수록 불공정 심화

○ 공공기관은 최소한 법령을 준수하는데 비해, 1차 협력사 이하는 대금 미지급, 지연지급 등 기본적 의무도 소홀*한 경우 발생

* (실례) 원도급자(1차)가 하도급업체(2차)에게 “공사종료 전까지는 공사선급금(또는 기성대금)을 지급하지 않겠다”는 계약조건을 부과하는 경우

□ (내용) 대금지급·결제조건 등 동반성장 병목 해소

○ 「2-3차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」 구축 → 공공기관이 1차에게 지급한 현금*이 2·3차로 온전하게 흐르도록 실시간* 관리·감독

* (지급방식) 공공기관은 현금을 지급하나, 1차 이하는 어음지급도 만연
(결제기일) 2차업체 요청에도 불구, 기관·1차업체 무관심·무성의로 지급지연 사례

○ 지급·결제 불량업체(1차)에 대하여 입찰시 불이익 부여방안* 검토

* (예시) 적격심사 신인도항목에 ‘대금 어음지급시 감점, 불공정 이력에 대해 감점’ 등 반영

과제 3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

□ (배경)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확대 추세*이나, 기업 현장에서는 공공구매 담당자의 소극적 제도운영·무관심 지적

* 공공부문 중기제품 구매(구매액, 중기비중): ('08) 61조원, 61% → ('11) 63조원, 67%

○ SW·전산시스템, 발전소 기자재 등 구매담당자는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을 선호

□ (내용)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 개선, 기관별 실적점검 강화

○ 소액물품(2.5억원 미만)은 중소기업과 우선계약을 의무화하고('12.상),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을 강화*

* 中企제품 직접구매 품목(120개) 준수여부 자동적발 시스템 구축('12.상)

○ 구매 담당자의 구매실적을 임직원 평가에 반영, 구매·거래기업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·지원 파트너십 유지*

* 공공기관 거래는 통상 1회성. 특히 준정부기관 등의 구매담당자는 동반성장 인식저조

과제 4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

□ (배경) 공공구매 물량의 한계, 중소기업간 과열경쟁 등 공공시장 포화로 중소기업 성장·혁신 정체 우려

○ 특히 발전사 납품업체들의 경우 기술력·매출규모 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수렴* → 경쟁양상은 기술·품질보다는 가격중심

* D발전사의 주요 협력업체 120개사 중 56%가 연매출 100억원 미만

□ (내용) 기관차원의 우수 中企제품 알리기, 정부차원의 海外진출 지원 박차

○ 공공기관별 추천을 통해 우수 납품기업 선정·발표(필요시 정부발표) → 민간으로의 판로 지원 효과

○ 공공기관-정부 자금매칭으로 해외진출 지원*, 공기업의 글로벌기업에 대한 구매력을 활용해 유망 中企의 해외판로 확대

* 동반진출 지원확충(동반무역촉진단 가동, 전력수출화사업 등 해외진출사업에 대·中企 컨소시엄 참여우대), 동반성장 투자재원 활용(한전 등 1,200억원 출연협약, '11.11)

과제 5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

□ (배경) 법령 등이 규정한 사항 외에는 R&D 등 적극적 동반성장 과제 발굴 노력 부족*

* 협력사와 R&D협력 확대 계획은 24%에 불과('11년도 동반성장 평가지표 선택비율)

○ 발전소·플랜트 등 주요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외산제품*이므로, 국내 기술력을 높여 국산화할 필요성*이 높다는 지적

* 화력발전소 건설비용(8천억원)의 30%, 유지보수 비용(年1,700억원)의 18%가 외산
* 외산수입시 많은 비용·시간 부담→문제발생시 해결적시성 저하·발전단가 상승 등 문제

□ (내용) 동반성장형 R&D 확충* 등 협력사 역량강화를 통해 자재·부품 국산화율** 제고

* 에너지R&D 과제의 중소·중견 참여비율 확대('11년 20%→'20년 50%)
** (예시) 발전소 건설기자재 현재 국산화율 70% → '20년까지 국산화율 85% 달성

○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약*,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** 등 기술·인력·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

*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또는 신·기보에 협력사 지원 자금 출연시 법인세(7%) 공제
** 정부·기업이 공동투자하여 2·3차 생산성지원(동서·서부발전 등 6개사-90개 협력사 참여중)

V 추진 및 점검체계 구축

◇ 핵심과제의 파급효과가 거래말단에 이르도록 유인체계 마련
◇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통해 적극적 실천을 유도

1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인센티브-체인 구축 (Incentive-Chain)

○ (정부→기관) 핵심과제 시행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, 기관평가 반영

○ (기관→내부 임직원) 부서·개인 평가시 성과급, 근평, 인사, 내부포상 등 담당자의 현실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명문규정 마련

○ (기관→기업) 공공입찰시 대기업의 하도급불공정 이력과 2차 업체에 대한 현금지급·결제기일 등을 종합평가**

* (예시) 中企제품 일정비율 이상 구매, 어음지급시 불이익, 지급기일 단축시 우대 등

2 동반성장 이행평가 체계 개선

○ 협력사에 대한 실태조사* 결과를 평가에 반영 → 현장의 동반성장 체감도를 반영한 Cross-check 평가체계 구축

* 현행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도 협력사의 체감도를 5% 반영

○ 기존 법·규정 준수여부 점검*에서 핵심 프로그램 발굴·이행실적 위주로 전환,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평가시스템 현실화

* (현행) 법령 등 준수 여부를 평가 → (개선) 법령 준수 여부는 불이행시 감점으로 전환, 제도개선·애로해소 등 노력을 평가

3 핵심 실천과제별 선도기관 지정

○ 2011년 동반성장 실적평가 결과*와 기관의지 등을 감안, 실천과제별 선도기관* 15개 내외 선정

* 공공기관별 특성(규모-공기업/준정부, 업무-인프라, 대민지원), 평가실적 등 감안

- 실천과제를 기관실정에 맞추어 "동반성장 간판정책*"으로 추진

* (예시) "중소·중견기업 Only 건설프로젝트", "하도급불공정없는 클린프로젝트"

4 공공기관 동반성장 애로해소 센터

○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공공기관 전담창구* 개설, 동반성장 관련 애로접수·중재** 또는 관계부처에 민원전달(지경부·공정위 등)

* 공공기관은 계약 기업, 2·3차 업체에게 '센터에 민원제기 가능' 공지 의무화

** 필요시 「수·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」에서 분쟁조정(상생법 시행령§11)

○ 기관별 애로 발생·해소 등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

* 동반성장 애로 발생시(관리책임 발생) → 감점 / 애로해소 노력에 따라 → 가점